

성명서를 통해 본 우리 도서관의 과제

Library Issues Stated in the Librarians' Proclamations

김 용 근(Yong-Gun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4. 국립도서관장의 전문직 보임 |
| II. 도서관 문제를 논의하는 방식 | 5. 정당과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한
도서관 발전정책 건의 |
| III. 성명서 분석 | 6. 시민단체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
표명 |
| 1. 도서관 정책담당 부서의 강화 | IV. 결론 |
| 2.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이슈 | |
| 3. 공공도서관 사서직 관장보임,
명칭 변경 및 민간위탁 | |

초 록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서관계의 의사와는 달리 어떤 계획을 실행하는 수가 많다. 공공도서관 명칭변경, 민간위탁 운영, 도서관 정책담당 부서의 폐지 등이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시점을 우리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그 대처방안으로 성명서, 건의서 또는 공한을 발표하거나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우리가 발표하는 항의문에는 어떤 논리로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정부기관은 어떤 계기로 도서관계의 염원과는 거리가 먼 도서관 발전 저해행위를 하는지도 검토한다. 그리고 도서관계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떤 논의가 있는지도 알아본다. 연구자들의 연구주제나 도서관계 여러 조직단체들의 활동은 위기상황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다.

주제어: 성명서, 건의서, 민간위탁, 아웃소싱,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contents of librarians' proclamations, recommendations and official letters stated on the library issues. Library issues included contracting out, outsourcing and name changes of public library. The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se issues was also analyzed and the research papers were studied to find out solutions of the issues.

Key Words: Proclamation, Recommendation, Contracting Out, Outsourcing, Public Library, School Library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ygkim@cu.ac.kr)

· 접수일: 2006년 11월 30일 · 최종심사일: 2006년 12월 11일 · 최종심사일: 2006년 12월 21일

I. 서론

올 해 우리 도서관계에는 두 가지 크게 반가운 일들이 있었다. 하나는 8월에 있었던 세계도서관 정보대회이고 다른 하나는 도서관법의 개정이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통하여 우리 도서관의 역량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오랜 숙원이던 몇 가지 숙제들이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도서관에는 시급히 개선되고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쌓여있다. 지금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지만 언제 다시 잠정화 될 수 있을지 모르는 문제들이 있다.¹⁾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충원문제도 현재 겨우 진행되고 있지만 확고한 정책의 기반 위에서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외형적으로는 새로운 도서관이 많이 들어서고 도서관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 등 우리 사회의 도서관도 점차 발전하는 양상을 띄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서관 각 부문에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

도서관 문제를 생각할 때 지금보다 더 좋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하여 수행되는 일상적인 업무와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하여 그것을 당장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도서관과 관련을 맺고 있는 문헌정보학 연구자, 현장 도서관의 사서,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서관 발전을 위한 경우를 생각해 본다. 연구자는 개인적인 관심에 따라 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요구에 따라 연구주제를 결정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주제의 결정은 우리 도서관 환경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주제인지 그리고 연구주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여러 관련된 문제들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많은 연구주제가 한국 도서관의 환경과는 거리가 있거나 적실성이 떨어진 주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문헌정보학 관련학회에서 다루고 있는 기획주제도 우리의 현장과 환경에서 요구되는 시급한 문제와는 관련성이 떨어져 있다고 관찰된다. 최근에 개최되는 학회발표회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도서관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다.²⁾

현장 사서진은 그들이 소속된 전문단체에서 여러 종류의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공립대학도

1) 2005년 하반기에도 안산시가 중앙도서관을 민간위탁 운영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가 2004년도 도서관계 10대 뉴스에 포함되고 있다. 2005년에는 “10대 뉴스보다 더 10대뉴스 같은 일들”에서 지적하고 있다. 도서관문화, 제46권, 제12호(2005.12), p.45-46.

2) 한국도서관협회의 각 전문위원회에서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법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도서관문화, 제47권, 제10호(2006.10), pp.26-47. 도서관 관련 웹 사이트에서는 “도서관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내용만 올려져 있고, 댓글도 없으며 조회수도 많지 않다(LIBNEWS '06.9.8).

서관협의회, 전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공공도서관협의회,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등에서는 학술잡지의 발행과 회원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에 대처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서관 주제도 현장의 시급한 문제는 많이 논의되고 있지 않아 보인다.³⁾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최근들어 많아지고 있다. ‘책읽는 사회만들기’는 ‘기적의 도서관’을 여러 지역에 설립, 운영하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도서관이 시민들과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 볼 수 있다.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와 ‘학교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워크(학도넷)’는 학교도서관의 정상화를 위하여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를 통하여 독서교육에 대한 일선 학교 독서교육 담당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전하고 있어 독서교육의 다양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도 독서교육에 대한 정부정책이 잘 못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도서관에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주로 관련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여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성명서를 만들어 여러 매체를 통하여 공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 보다는 약간 낮은 수위의 항의로 건의서를 관련 부처에 전달하기도 한다. 드문 일이지는 하지만 대통령 선거 때에 각 정당마다 우리 도서관의 현안을 제시하고 집권 시에 정책으로 삼아주기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위기상황에서 도서관계가 중심이 되어 시민들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활동은 다양하지 못하였던 것이라 여겨진다. 사건이 일어나면 그 때, 그것도 소수의 관련인사들이 정부부처로 지방자치단체로 분주히 방문하면서 도서관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도서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하부구조가 없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어떤 글에서 “도서관 역사를 다룬 외국 책 이름은 ‘도서관발전사’인데 한국에서 나온 책 이름은 ‘도서관운동사’⁴⁾라고 쓰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10여년에 걸쳐 우리 도서관계가 펼쳐 온 ‘운동사’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서관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위기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위기상황에서 만들어진 성명서, 건의서, 공한 등을 분석하고, 그 당시 연구자들의 연구논문은 위기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는지도 검토한다.

3) 최근 도서관 관련 단체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서 몇 가지 적실성 있는 주제가 논의되고 있다. 대학도서관협의회 의 “저작권법의 이해-도서관 보상금제도의 문제점”(2004.10.22), “전자자료 구독의 문제점과 대책”(2006.10.27),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이 주최한 “한미 FTA와 도서관”(2006.9.29),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의 실무자 워크숍에서 다룬 주제발표와 공모주제의 내용 등이다(’06.7.13-14, 제주도 서귀포KAL호텔).

4) 다음의 두 단행본은 우리나라 도서관발전의 역사를 ‘도서관운동사’의 관점에서 연구한 것이다. 김종성,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사(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0), 이연옥,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2)

II. 도서관 문제를 논의하는 방식

도서관 문제를 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논의하는 경우는 연구자들이 연구논문을 통하여 이론적 또는 실제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 연구자는 연구주제를 결정하고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형식에 맞추어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것이다. 가끔 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를 수행하게 될 때에는 연구주제가 미리 결정되어지므로 연구자가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많은 논의는 없었지만, 연구주제가 우리의 도서관 환경과 현실에 얼마나 적실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도서관 현장은 위기상황을 맞아 허우적거리는데 연구논문은 그것과는 거리가 있는 '미래 도서관'을 논의하고 있어도 좋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연구자 집단의 조직인 학회는 어떤가. 매년 두 차례씩 개최되는 학술발표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는 얼마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있는지도 확신이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학회에서 가끔 기획주제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그 때도 그 주제가 도서관의 당면과제와는 거리가 있는 문제를 다루는 수가 많다.⁵⁾

수년전 문헌정보학 관련 4개학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⁶⁾를 개최하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펼친 기회가 있었다. 이러한 형식의 '도서관문제 논의'가 자주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된다.

현장 사서진은 개별도서관에 소속되어 일상적인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여야 되므로 연구를 하거나 현장사례를 논문 형식으로 발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학도서관 관련 두 협의회는 매년 회원들의 논문으로 논문집을 발행하고 있다. 이들 논문집에 수록되는 개별 논문의 내용은 투고자 개인의 연구결과이거나 사례연구인 것이다. 한편 이들 협의회⁷⁾에서는 매년 연수회를 개최하고 논문 발표회를 기획주제로 하고 있으며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제토론을 많이 하고 있다.

도서관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성명서, 건의서를 발표하고는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1998년 12월에는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가 '공공도서관 위기상황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열었으나 교육부나 교육청 관계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다.⁸⁾ 공공도서관 문제가 비상상태로까지 접어들기 전이기는 하지만 1996년 12월 전국사서협회와 도서관운동연구회는 '공공도서관 관장, 그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열었

5) 최근 몇몇 학회에서는 도서관의 당면문제를 기획주제로 하여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와 한국비블리아학회에서는 학술발표회 때마다 기획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06년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당면과제"와 "디지털콘텐츠의 관리 및 유통: 문화원형콘텐츠를 중심으로"가 각 학회의 기획주제이다. 기획주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주6)과 관련시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6) "문헌정보학의 과제와 전망," 제8회 4개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2000.7.6-7.7, 경주조산호텔, 이 대회에서는 기초연설과 4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대회전에 미리 주제발표자에게 연구할 주제를 제시하여 연구하게 하는 것이다. 주제의 선정방식과 발표 및 토론형식이 학회의 학술발표회와 다르다.

7)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공공도서관협의회에서도 매년 세미나를 열고 있다. 2006년도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학술세미나 주제: "Ubiquitous library: 전문도서관의 미래와 발전"(2006.6.29-30, 부산 글로리콘도).

8) "공공도서관 명칭 변경 저지활동," 도서관문화, 제39권, 제6호(1998.11.12), p.57.

다.⁹⁾ 2000년 6월에 개최된 ‘사서자격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에는 참석자가 불과 50여명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보고이다.¹⁰⁾ 현장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도서관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를 논의하는 것이다. 성명서, 건의서, 의견서 등의 형식으로 발표된 문건과 당시에 기록된 문헌을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당시 우리가 발표했던 성명서, 건의서에서 호소하던 내용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건의 조사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행하는 ‘도서관문화’에 수록된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그 외는 도서관 관련 인터넷 웹 사이트에 올라있는 문건을 조사하여 사용하였다. 성명서 형식의 문건이 ‘도서관문화’에 처음으로 자료로 수록된 것은 1993년 2월에 발행한 34권 1호에 한국도서관협회의 학교도서관위원회가 교육부¹¹⁾ 장관에게 보낸 ‘초등학교 사서교사 연수과정 운영의 부당성을 건의’하는 것이다.

Ⅲ. 성명서 분석

도서관 현장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나타내는 일반적인 현상은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건의서를 관련 부처에 전달하는 것이다. 가끔 의견서를 관련 부처에 보내어 도서관계의 주장을 이해시키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문건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한 문건은 언제, 어떤 계기로 만들어지며, 누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에는 어떤 설명을 가하지 않아도 우리 도서관계는 그 함의를 이해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원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하여 통계처리를 하거나 분석결과를 제시하기 위하여 도표로써 나타내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 그대로를 제시하여 당시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시도하였다.

1. 도서관 정책담당 부서의 강화

가. 행정 쇄신 과제 제출¹²⁾

도서관계의 현안인 ‘공공도서관의 소속부서 일원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1994년 4월 27일 한국도

9) 이 심포지움에서는 ‘공공도서관 관장에 대한 이론적 이해’, ‘나는 관장자리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런 관장을 원한다.’ 등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도서관문화, 제37권, 제6호(1996.11.12), p.64.

10) 한국도서관협회 60년사, p.339.

11) 성명서 발표 시점의 명칭을 사용함. 교육부(1990-2001.1.28), 교육인적자원부(2001.1.29-현재)

12) “행정쇄신과제 제출서,” 도서관문화, 제35권, 제2호(1994.3.4), pp.144-148.

서관협회에서 마련한 행정쇄신 과제를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공공도서관 소속부서가 3원화 되어있어 도서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보고하였다. 행정경로의 3원화로 도서관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는 행정력을 행사할 수 없고, 협조 요청만을 할 수 있는 형편으로 도서관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보고하였다. 공공도서관 운영체계 3원화의 문제점을 행정체계, 재정체계, 인사체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건의사항도 제출하였다.

나. 도서관 정책 담당부서 강화 건의¹³⁾

문화관광부가 '새 문화정책'을 발표하면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을 표명하는 시점에 맞추어 한국도서관협회가 건의서를 전달한 것이다. 1999년 문화부가 도서관 정책업무를 담당하면서 '도서관정책과'를 주무 부서로 하였으나 정부의 조직축소 방침에 따라 '도서관박물관과'로 개편되었다. 도서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처음의 조직인 '도서관정책과'로 환원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

다. 문화관광부 조직개편 방침에 대한 도서관계의 공동 입장¹⁴⁾

문화관광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도서관박물관과'를 폐지하고 도서관 정책기능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이관하겠다는 결정에 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와 문헌정보학 관련 6개 학회가 공동으로 입장 표명을 하였다. 이 건의서에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 문화정책과 내에 도서관 정책 담당자 배치,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전문가 임명 및 직급 차관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 국립중앙도서관 내 정책집행 담당부서 전문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부서 내 도서관정책/행정 담당 전문직원 배치,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반드시 과 단위 이상의 전담부서를 두고 전문직원 다수 배치, 도서관 지원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도서관 전문단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책(제도적, 재정적) 마련,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계(한국도서관협회)와의 상시적 협력체제 강화 등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라.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박물관과 폐지'에 대한 성명서¹⁵⁾

"참여정부는 도서관 정책을 포기하는가-도서관박물관과 폐지는 불가하다.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한국도서관협회 기획위원회에서 도서관박물관과 폐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내기로 결정하고 '04년 12월 3일에 발표하였다. 그 내용에는 도서관계가 요망하는 도서관박물관과의 폐지를 실행하고 그 기능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이관한다고 하지만, 과연 국립중앙도서관이 그 역할

13) "도서관 정책 담당부서 강화 건의," 도서관문화, 제40권, 제2호(1999.3.4), p.41.

14) "문화관광부 조직개편 방침에 대한 도서관계의 공동 입장", 도서관문화 제45권 제7호('04.7), pp.108-109.

15) "참여정부는 도서관 정책을 포기하는가-도서관박물관과 폐지는 불가하다.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도서관문화 제45권, 제12호(2004.12), pp.92-93.

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한다. 또한 도서관 관련 소속 부처가 산재되어 있고, 공공도서관 장서수의 부족, 도서관수의 부족 등 도서관계의 현황도 설명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03년 8월 18일 “문화관광부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및 질의”를 하고, '03년 9월 19일에는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 폐지 검토에 대한 의견”으로 “정부는 도서관정책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도서관박물관과 폐지는 불가하다”라는 의견서를 전달하였다.¹⁶⁾

한편 국정 넷포터로 활약하고 있는 광동철 교수는 “도서관박물관과 폐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글을 국정브리핑(www.news.go.kr)에 올렸다.

'04년 도서관계 10대 뉴스로 “문화관광부 조직개편으로 도서관정책 부서 폐지”가 올라가 있다. 도서관계는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정부 방침을 변경시키지 못하였다. 정부에 대한 도서관계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에 대하여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

도서관계가 ‘도서관 정책담당 부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정부가 기구축소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서관 정책담당 부서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도서관계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문화부 창설 당시의 도서관기획과 수준의 원상 복구를 호소하는 것이다.

2.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이슈

가. 초등학교 사서교사 자격연수 과정 운영에 대한 건의서¹⁷⁾

'92년 12월 28일 교육부가 각 시도로 발송한 초등학교 사서교사 자격연수과정 운영에 대한 지침 공문의 부당성에 대하여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건의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다. 건의서의 내용은 현재 전국의 30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매년 500명 이상의 사서교사가 배출되고 있으나, 임용고시에서 사서교사를 모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서교사 자격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서교사 자격연수는 거의 모두가 사서교사가 되기 위하여 연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을 얻기 위하여 강습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도서관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육부의 사서교사에 대한 이해는 이미 이 때에도 잘 못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도서관 운영은 전문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발송한 서신¹⁸⁾

교육부 장관이 각급 학교에 사서교사를 채용하지는 일부 출판계의 의견에 대하여 ‘한 학교에 교

16) 이 두 가지 문건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유인물로 회원에게 배포하였다.

17) “초등학교 사서교사 자격연수 과정 운영에 대한 건의서,” 도서관문화, 제43권, 제1호(1993.1.2), pp.47-48.

18)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발송한 서신-이해찬 교육부장관님께 드리는 말씀,” 도서관문화, 제39권, 제3호(1998.5.6), pp.68-69.

사를 한 명씩만 늘려도 연 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대신 국어교사들의 정기연수에서 독서 교육과정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힌 언론 보도에 대하여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의 역할과 독서교육은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학교도서관법을 개정하여 각급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도 기술하였다. 우리나라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설명하고, 현재의 사서교사 배정 현황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

다. 정보화 사회에 대응한 학교도서관 발전 방안¹⁹⁾

한국도서관협회의 학교도서관위원회가 마련하여 2000년 4월 6일 교육부에 제출한 학교도서관 발전 방안이다. 이 보고서는 학교도서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첫째, 학교도서관과 교육 부분에서 정보사회와 교육환경의 변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학교도서관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둘째, 학교도서관의 현황과 운영 개선 방향부분에서 학교도서관의 자원 현황 및 개선 방향, 학교도서관의 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 학교도서관 운영의 모범 사례를 다루고 있다. 셋째, 학교도서관 정보화 방안부분에서 학교도서관 정보화의 구조도, 단계별 추진 방안, 학교도서관 정보화 시스템의 교육적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여 학교도서관 발전 방안으로 제출하였다.

라.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²⁰⁾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에서 작성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확정된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추진 배경 및 경과, 학교도서관의 일반 현황, 현장의 의견 수렴결과, 선진국의 정책방향, 학교도서관의 비전과 전략,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세부추진 방향,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체제 정립, 향후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2년 8월 확정 발표를 하기 전에 이 종합방안에 대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2002년 7월 26일에 열었다. '학교교육에서 학교도서관의 역할',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실태 및 외국의 정책방향',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7명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에 나선 학계, 도교육청 장학사, 시민단체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사서교사의 확대 배치가 학교도서관의 운영을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피력하였다.

이 시기에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²¹⁾ 대학도서관의 비전과 목표, 문제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기대 효과 등을 비교적 자세한 사항까지 제시하고 있다.

19) "정보화 사회에 대응한 학교도서관 발전 방안," 도서관문화, 제41권, 제2호(2000.3.4), pp.52-56.

20)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도서관문화 제43권 제4호(2002.7.8), pp.98-110

21)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도서관문화, 제43권, 제6호(2002.11.12), pp.66-79.

마. 학교도서관 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 촉구를 위한 성명서²²⁾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2004년 7월 1일에 발표한 성명서이다.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사업을 당초의 약속대로 시행하라. 둘째, 비정규직 사서의 학교도서관 배치를 철회하고 사서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할 근거를 마련하라. 셋째,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전담부서를 설치하라.

바.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및 관련 학회의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성명서²³⁾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와 관련 6개 학회가 공동으로 2004년 11월에 발표한 성명서이다. 이 성명서에는 네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한다. 둘째, 가칭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공감한다. 넷째,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에게는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김재윤 국회의원의 14인이 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 상정 되면서 전문 인력 배치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다. 기존의 사서교사들은 사서교사 배치원칙을 주장하고, 비정규직으로 학교에서 도서관 직원으로 활동하는 사서들은 '학교사서' 형식의 배치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시기에 '도서관메일링리스트'에서는 이 두 주장에 대한 토론이 대단히 많이 있었다.²⁴⁾

사. 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학교육협의회의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성명서²⁵⁾

이 성명서에서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교도서관은 학교규모에 따라 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를 중심으로 운영, 관리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학교도서관 진흥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서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정부 방침에 공감한다.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에 대해서는 각자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을 기준으로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실기교사 또는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22) "학교도서관 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 촉구를 위한 성명서," 도서관문화, 제45권, 제7호('04.7), p.110.

23)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및 관련 학회의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성명서," 도서관문화, 제45권, 제12호('04.12), pp.92-93.

24) 그 중의 몇 가지 글을 소개한다. "도서관 발전을 가로막는 내부의 적" 글 번호 15682('04.9.24), "사서교사와 행정직 사서의 차이" 글 번호 15709('04.10.3), "갈등의 봉합을 간절히 바라며" 글 번호 15692('04.9.25),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법개정에 주력합시다" 글 번호 15707('04.10.3)

25) "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학교육협의회의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성명서," 도서관문화, 제46권, 제1호('05.1), pp.70-71.

아.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²⁶⁾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도서관 관련 7개 단체가 공동으로 2006년에 사서교사 배치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공동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2005년 9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도서관법에도 사서교사의 배치가 의무규정으로 되어있고, 독서교육과 논술교육이 중요시 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사서교사의 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이라는 정책을 수립하여 학교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사서교사 배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2005년 9월 30일에는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도서관 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전국의 문헌정보학과 학생들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하였다. 그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동대책위원회의 위원과의 면담을 요청 하였다.²⁷⁾

학교도서관의 정상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최근의 연구논문을 살펴본다. ‘학교도서관 발전의 리더십’을 논의한 논문에서는 현장 리더십, 정책 리더십, 학문 리더십이 동시에 작용되어야 학교도서관이 발전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²⁸⁾ 같은 저자의 다른 논문에서는 학교도서관이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의 학교도서관 정책 지도력 형성, 사서교사 임용, 비정규직 사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²⁹⁾

한 도서관 관련 웹 사이트에는 최근 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인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염려하는 글³⁰⁾이 연속적으로 올려지고 있다. 2007년 사서교사 채용인원이 102명으로 확정되고는 다시 ‘102명의 의미’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 상담교사, 치료교사의 채용인원에 비하여 사서교사의 인원이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 글에서는 ‘사서교사의 임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서교사는 1년에 0.1%, 영양교사는 1년에 15% 임용’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다.

3. 공공도서관 사서직 관장보임, 명칭 변경 및 민간위탁

공립공공도서관 사서직 관장 임용문제와 관련하여 1996년 7월 공공도서관 사서직 관장 보임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도서관 관련 9개 단체 대표가 모여 ‘공공도서관수호비

26)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의 웹사이트 참조

27) “9월 30일 결의대회-교육부 면담보고,” 도메리 글 번호 16644.

28) 김종성, “현단계 우리 학교도서관 발전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2호(2005.6), pp.259-286.

29) 김종성, “현단계 우리 학교도서관의 변화와 도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3호(2003.9), pp.67-92.

30) “앞아서 뺏길 것인가 일어서서 얻어낼 것인가”(2006.9.14), “사서교사 임용고시 초읽기”(2006.10.13), “사서교사 102명의 의미”(2006.11.3), “사서교사 임용확대가 절실하다”(2006.11.15) LIBNEWS 홈페이지. 2007년도 사서교사 임용 인원은 106명이다.

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문화 역행하는 공공도서관 말살책략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각 단체별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이 위원회에서는 “공공도서관 사서직 관장 보임에 관한 법령준수 촉구”라는 제목의 공한을 각 시·도 임용권자에게 발송하였다.

이 때부터 시작된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05년에도 안산시가 도서관운영을 민간위탁 하겠다는 시도를 하였다.

가. 정보문화 역행하는 공공도서관 말살책략 즉각 중단하라³¹⁾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이다. 정보문화를 선도하는 공공도서관의 명칭변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작금의 공공도서관 말살책략은 누구를 위한 만행인가고 묻고 있다. 1991년 4월 8일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전문 사서직 관장 보임에 따른 행정상의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배려하였다. 그러나 사회교육관, 교육문화관, 문화예술사업소 등으로 명칭변경을 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법의 적용대상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행정직 공무원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책략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성명서의 발표 시점에서부터 공공도서관의 사서직 관장 보임을 벗어나기 위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공공도서관 명칭변경, 민간위탁 운영, 기구축소 등 공공도서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책략들이 곳곳에서 꾸며지고 있는 것이다.

나. 공공도서관장 사서직 보임에 관한 법령 준수 촉구³²⁾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사서직 관장 임용촉구 공한을 관계자에게 보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모든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공한을 시·도 임용권자에게 발송하였다.

이 공한에는 1991년 3월 8일 현행 도서관법에서 1996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전문 사서직 관장의 보임을 시행하여, 행정상의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배려하였다는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다.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계획 철회 요청³³⁾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2개 도서관과 새로 개관할 1개 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신문지상에 신청자 모집공고를 냄으로서 한국도서관협회는 “공공도서관의 관리, 운영이 민간 위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공한과 “반대 의견서”를 광주시청에 보냈다. 또한 ‘공공

31) “정보문화 역행하는 공공도서관 말살책략 즉각 중단하라,” 도서관문화, 제37권, 제6호(1996.11.12), pp.57-59.
 32) “공공도서관장 사서직 보임에 관한 법령준수 촉구,” 도서관문화, 제37권, 제6호(1996.11.12), p.60.
 33)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계획 철회 요청,” 도서관문화, 제38권, 제4호(1997.7.8), pp.57-58.

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광주일보에 발표하였다.

전국사서협회도 광주시청에 질의서와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계획 철회 요청 공한”을 1997년 8월 22일 한국도서관협회장의 이름으로 광주시장에게 보냈다. 그 내용에는 공공도서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지적자유권, 문화 향수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일본에서는 민간위탁이 실패를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하였다.

“공립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1997년 8월 25일 한국도서관협회의 이름으로 광주시에 제출하였다. 공립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문제의 본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도서관 서비스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는 ‘책임의 유기’라고 지적하였다. 공공도서관이 민간위탁에 적합하지 않는 이유를 지적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지식, 사상, 문화와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역정보센터이고, 도서관봉사 이념에 충실한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공성은 크지만 수익성이 없으며 시민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과제로 시설, 자료, 전문직원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도서관을 지원하고, 사서직원에 대한 전문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할 수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당부하였다.

“광주광역시립 공공도서관의 민영화 계획은 취소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광주일보 '97년 9월 1일에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를 광고로 내었다. 그 주요내용은 왜 도서관은 민영화가 될 수 없는가, 도서관서비스의 활성화는 어떻게 이루어나가야 하는가, 도서관은 광주시에서 직접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립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사서협회가 질의서를 광주시장에게 보냈다.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은 시민들의 지적자유권과 문화향수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행정 편의주의의 발상이라고 지적하였다. 광주시장은 출마 당시 도서관에 관련된 공약사항이 실천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외국 사례를 조사하였다면 그 내용을 밝히라고 촉구하였다. 도서관 전문가인 도서관 사서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도 질의하였다.

“광주시의 시립도서관 민간 위탁에 대하여 광주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전국사서협회가 성명서로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의 내용은 공공도서관 민간 위탁은 시민의 기본 권리인 지적자유권과 문화향수권을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직무유기이다. 민간위탁으로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하여 유효화할 것인가 하고 묻고 있다.

라. 공공도서관 민간 위탁의 허와 실³⁴⁾

광주시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자 ‘녹색소비자 문제 연구원’이

34)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허와 실,” 도서관문화, 제38권, 제5호(1997.9.10), pp.47-49.

“광주광역시립도서관 민간 위탁 관련 시민단체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헌정보학 교수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였다. 여기에서 발표된 한 주제의 내용을 간추려 옮기고 있다. 광주시가 공공도서관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대기업의 문화재단과 협의하여 공동출자 형식으로 공익법인을 설립,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반대하는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보편적인 정보 접근권 부여, 서비스의 질적 저하, 특정 계층만이 선호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정보의 수집으로 정보의 획일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국내 한 기업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의 사례를 검토해 볼 것을 충고하고 있다.

마. 국립중앙도서관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³⁵⁾

1998년 5월 25일 정부의 기획예산위원회가 정부 각 부서에 통보한 '재정사업의 외부자원 활용지침'에 의하면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을 포함한 96개 재정사업을 민간에 위탁경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도서관협회는 '국립중앙도서관 민영화의 불가론'을 성명서로 만들어 문화관광부 장관 및 각 언론사에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기본권인 지적자유 보장은 정부의 책임, 국립중앙도서관은 민족의 대동맥, 국가 도서관 정책의 집행기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대표도서관, 세계 유례없는 국가대표도서관 민영화, 경제 논리에도 분별은 있어야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는 “국립중앙도서관 민영화 논의 관련 의견”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공한으로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앞의 성명서에서 지적한 사항과 동일하다.

이 시기에 국립도서관들이 재원부족으로 민간 공익법인이나 사회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국립도서관 민간위탁 검토 계획 철회 요청 공한”을 해당 구청장에게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보냈다. 그 결과 성동구청에서는 구직영으로 하고, 중랑구청은 민간위탁을 결정하였다.

바.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에 관한 긴급 건의 및 면담 양청³⁶⁾

사회교육법개정법률안(평생교육법)의 내용 일부를 삭제해 주기를 요망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지방교육청에서 평생교육 체제의 중심기관인 공공도서관을 없애는 일의 법적 근거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 대한 긴급건의를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한 사회교육법개정법률안 수정 건의서”는 사회교육법개정법률안에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에서 공공도서관을 없애고 이를

35) “국립중앙도서관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 도서관문화, 제39권, 제3호(1998.5.6), pp.64-65.

36)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에 관한 긴급 건의 및 면담 양청,” 도서관문화, 제40권, 제1호(1999.1.2), p.81.

평생학습관으로 전환하는 근거로 거론하고 있어, 법률의 기본 정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공공도서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서울시의회가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 촉구 건의문"은 서울시 의회가 도서관법에 명시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라고 한 법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도서관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도서관법의 본질은 평등과 형평성을 그르치며 시대적 상황을 고려치 않아 기관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공공도서관 책임자는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포괄적인 경험과 지식, 능력이 요구되나 사서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가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 불가 의견"은 서울시 의회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한 한국도서관협회의 의견이다. 종합의견은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하나는 서울시 의회가 촉구하고 있는 도서관법 개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이고, 문화관광부도 서울시 의회의 요구가 도서관법의 근본적인 취지와 다르므로 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의견서에는 법 개정 불가 사유 다섯 가지와 공공도서관 없애기와 기능전환 제한 필요성을 두 가지 지적하고 있다. 전자의 사유로는 도서관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공정한 처사가 아니며, 의회는 공공도서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장은 전문직 사서로 보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후자의 필요성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서관수가 더 부족해지고 부실해 질 것이고, 도서관을 임의로 없애는 것을 제한하여야 된다는 주장을 분명히 하였다.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낸 공한"은 공공도서관 민간 위탁 검토 철회 요청에 관한 내용이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에서 공공도서관을 제외시키라는 것이다.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검토 철회요청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회신"에는 전문성을 지닌 공익기관이 공공도서관을 운영한다면 위탁경영이 반드시 도서관의 퇴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서울시 의회가 결의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 촉구 건의문"은 우리 사회의 일부 기득권자들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60년사에서 이 사실에 대한 전후 사정을 길게 설명하면서 건의문 전문을 게재해 두고 있다.³⁷⁾

'서울시 의회가 보여준 자가당착적 태도'와 '서울시 의회 술책에 대한 협회의 대응'이라는 제목아

37) "한국도서관협회 60년사," pp.301-302.

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사. 한겨레신문과 대한매일신문에 “공공도서관 말살 정책”을 철회하라는 성명서 발표³⁸⁾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한겨레신문과 대한매일신문에 공공도서관 말살 정책을 중단 하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서울시 교육청과 일부 지방교육청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공 도서관의 명칭을 평생학습관 등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것은 일부 공무원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책략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라고 질타하였다.

1998년 11월 5일 한겨레신문에 “공공도서관 말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 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은 민주시민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공공도서관의 명칭변경의 저의는 지방교육청 관련 일부 공무원의 기득권 수호 책략이다. ‘도서관 없애기’는 세계의 웃음거리 이다. 도서관 수준이 곧 국력을 좌우한다. 역사의 비난과 책임을 두려워하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1998년 11월 19일 대한매일신문에는 “공공도서관 죽이기 책략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발 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나라는 도서관 후진국, 공공도서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공 공도서관은 시민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공공기관, 왜 공공도서관을 없애려 하는가, 서울 시교육청의 이중성,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워라, 우리의 요구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는 도서관의 위기상황을 논의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18-19일 전남대학교 에서 “사회환경의 변화와 도서관의 진로”라는 대주제 아래 ‘학교도서관의 진로’, ‘공공도서관의 진 로’, ‘대학도서관의 진로’ 등의 소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의 관계자는 ‘공공도서관 명칭변경 저지활동’을 경과보고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98년 한 해 동안 강원평생교육정보관, 인천시, 울산시의 시도 무산, 서울시교육청 의 시도 등 여러 사건에 대한 싸움 과정에서 도서관계의 상반된 입장표명이 우리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성을 훼손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도 적고 있다.³⁹⁾

공공도서관의 사서직 관장 보임, 명칭변경, 민간위탁에 관련된 연구는 많이 수행되어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과 정리업무의 아웃소싱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에 관련 된 연구로는 윤희윤 교수가 논문 “공공도서관계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관계법령을 중심으로”를 시작으로 다수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쟁점사항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⁴⁰⁾ 위탁구상의 목적,

38)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도서관문화, 제39권, 제6호(1998.11.12), p.60.

39) “공공도서관 명칭 변경 저지 활동,” 도서관문화, 제39권, 제6호(1998.11.12), pp.56-59.

40) 윤희윤, “공공도서관 위탁구상의 쟁점분석과 대응방안,” 도서관, 제53권, 3호(1998. 가을호), pp.3-46.; 윤희윤, “한 국공공도서관의 해체위기와 탈출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제30권, 제2호(1999.6), pp.29-53.; 윤희윤, “도서관의 아웃소싱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3호(2000.9), pp.1-21.,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명칭변경의 명분, 구조조정 배경, 대응방안 등을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후자에 관한 연구로는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하던 시기를 지나서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목록업무의 아웃소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고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⁴¹⁾ 그리고 대학도서관 운영과 정리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을 연구한 석사학위 논문도 4편 생산되어 있다.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문제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도서관계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 방식으로는 공공도서관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될 것이다.

4. 국립도서관장의 전문직 보임

한국문헌정보학회를 비롯한 도서관 관련 7개 학회와 협의회가 비전문직 국회도서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04년 6월 새로 임명할 국회도서관장에 전문직 인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청원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도서관장은 다시 정치인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이에 2005년 1월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가. 국회도서관장 임명에 관한 성명서⁴²⁾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회도서관 관장은 정치적 배려에 의해 임명하는 관례를 지양하고 개방임용의 절차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라. 국회도서관장의 임용절차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회도서관장 추천위원회의 설치 등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라고 촉구하였다.

나.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전문가 임명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전문가 임명 및 직급을 차관급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라는 요구는 2004년 6월에 발표한 "문화관광부 조직개편 방침에 대한 도서관계의 공동 입장"의 여러 주장 중에 한 가지로 포함되어 있다. 도서관정책 기능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한다는 통보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시점에 나온 주장이다.

성과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박동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2004.3), pp.51-75.

41) 최근의 연구논문을 예로 든다. 노지현, "편목업무 아웃소싱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의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6.6), pp.231-253., 그 외에 목록업무 아웃소싱의 타당성 분석, 국립중앙도서관 정리업무의 아웃소싱, 대학도서관 업무의 아웃소싱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42) "국회도서관장 임명에 관한 성명서," 도서관문화, 제46권, 제1호(2005.1), p.67.

5. 정당과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한 도서관 발전정책 건의

여기서는 두 가지 유형의 문건을 고찰해 본다. 하나는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차기 정부에서 도서관 분야에 대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공한으로 보내어 정책공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자료이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비서실과 여당 대표에게 공공도서관 말살책략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문서이다.

가. 우리나라 도서관 분야에 대한 차기 정부 정책공약을 부탁드리는 말씀⁴³⁾

한국도서관협회가 대통령 입후보자 7명에게 우리나라 도서관분야에 대한 정책공약을 부탁하는 공한을 보냈다. 그 내용은 도서관의 중요성,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황에 대한 사항으로 도서관수, 자료량, 전문인력, 운영비를 설명하고,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법령준수, 행정체제 일원화, 재정투자, 인력구조 개선, 도서관수의 증대를 지적하였다. 차기 정부의 도서관 정책에 대하여 도서관계가 관심을 가지고 기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선 후보자와 그 소속 정당에 대하여 협회의 부탁도 함께 전달하고 있다.

나. 도서관운동연구회가 각 정당 대선후보자에게 도서관정책을 질의⁴⁴⁾

'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서관운동연구회가 통신업체들이 추진했던 '97대선후보 초청 사이버 대토론회'를 통해 각 정당에 보낸 도서관 관련 정책 질문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행정조직, 예산, 시설과 자료, 봉사대상 인구, 직원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다. 당시의 정당조직인 국민신당, 새정치국민회의, 신한국당에서는 답변을 보내주었다.

다.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한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 정책 건의서⁴⁵⁾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긴급 건의문- 도서관은 21세기 지식정보시대의 핵심문화기반시설로 적극 육성되어야 한다.”라는 긴 제목의 건의서를 한국도서관협회와 교수협의회 그리고 4개 학회 대표들이 공동으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21세기는 지식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사회, 교육행정 당국의 도서관 없애기는 반개혁적 처사, 도서관은 출판을 포함한 문화산업의 근간, 도서관은 21세기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 이제 우리나라도 도서관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건의사항으로 서울시가 4개 공공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려는 의회의 결정을 철회하도록 조치해 줄 것과, 도

43) “우리나라 도서관분야에 대한 차기 정부 정책공약을 부탁드리는 말씀,” 도서관문화, 제38권, 제6호(1997.11.12), pp.81-83.

44) “도서관운동연구회가 각 정당 대선후보자에게 도서관정책을 질의,” 도서관문화, 제39권, 제1호(1998.1.2), pp.80-87.

45)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한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 정책 건의서,” 도서관문화, 제40권, 제1호(1999.1.2), pp.74-77.

서관에 대한 재정지원과 전문인력 육성지원을 확대해 줄 것과, 도서관 진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갖추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건의하였다.

라. 새정치국민회의에 제출한 우리나라 도서관발전 정책 건의⁴⁶⁾

“새정치국민회의는 집권 여당으로서 올바른 정책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행정 당국의 도서관 없애기를 막아주십시오.”라고 절박한 도서관계의 심정을 밝히고 있는 건의문이다. 앞의 대통령비서실에 건의서를 제출한 도서관 분야 관련대표들이 집권여당에 보낸 건의서에도 동참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21세기는 지식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사회, 서울시 교육청의 도서관 없애기는 반개혁적 행위, 도서관 없애기에 동조한 서울시의회, 도서관 활성화는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 선거 공약, 집권 여당은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회복하라는 등을 주문하였다.

지난 6월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는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걸어서 10분내에 도서관을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하였다.⁴⁷⁾

6. 시민단체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 표명

시민단체들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경우는 주로 도서관이 부당하게 정부기관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정부 방침의 잘못을 지적하는 형식이 많다.

가. 공공도서관 증설과 도서관콘텐츠 확충을 위한 대정부 정책제안⁴⁸⁾

2001년 8월 6일 ‘도서관콘텐츠 확충과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이 중심이 되고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기서 발표된 정책제안으로는 공공도서관 증설 10개년 계획을 국책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콘텐츠 예산의 정책적 확보- 연간 1천억원 이상, 공공도서관 운영체제 및 디지털 텍스트 개발과 문화DB구축 10개년 계획 수립, 도서관 구입 도서의 차등 정가제 실시(일반 정가의 3배)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학교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워크(학도넷)⁴⁹⁾

2004년 4월 22일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서는 다섯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공교육 정상화의 과제로

46) “새정치국민회의에 제출한 우리나라 도서관발전 정책 건의,” 도서관문화, 제40권, 제1호(1999.1.2), pp.78-80.

47) “김종철, 기적의 프로젝트 발표/민주노동당,” LIBNEWS(2006.4.25)

48) “공공도서관 증설과 도서관콘텐츠 확충을 위한 대정부 정책제안,” 도서관문화, 42권, 4호(2001.7.8), pp.60-64.

49) ‘학교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워크’의 활동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본문의 나, 다, 라 항의 내용은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였다.

하라,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에 필요한 지원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하라, 학교의 중심부에 학교도서관 공간을 확보하라, 학교운영비의 5%를 도서 구입비로 하라,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 배치를 연차 계획으로 세우고 정원과 예산 확보를 하라는 등의 내용이다.

다. 교육부의 비정규직 사서의 처우개선안 발표에 대한 성명서

학도넷이 2004년 6월 18일 비정규직 사서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서 문제 해결을 학교도서관 활성화, 공교육 정상화 과제와 연계시켜라, 비정규직 사서의 신분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라, 비정규직 사서문제의 해결은 정규직 사서교사의 배치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실행하라는 등의 사항을 촉구하고 있다.

라.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 토론회

학도넷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라는 주제로 2004년 7월 7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 “학교도서관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학교도서관 담당 인력의 현황과 과제”라는 두 주제가 발표되고 토론이 있었다.

마.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위한 시민연대⁵⁰⁾

서울시 교육청이 2005년 3월 발간한 “초등학교 독서지도자료”와 “중등 독서교육 매뉴얼”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반대 성명을 4월 27일에 발표하였다. 독서지도 자료에 바탕한 독서교육 철회, 독서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독서인증제의 폐지, 독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여건 조성, 독서운동단체들의 반성 촉구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바. 어린이도서연구회 성명⁵¹⁾

서울시 교육청이 발간한 “독서지도자료집”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2005년 4월에 발표하였다. 획일화된 독서교육은 책 읽는 즐거움을 빼앗고, 독서를 평가의 도구로 하게 되고,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출판의 다양성을 거세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독서인증제의 실체를 밝히고 “독서지도자료집” 발간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하였다.

50)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의 홈페이지에서 참고.

51)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홈페이지에서 참고.

IV. 결 론

우리나라 도서관 역사를 '도서관 발전사'가 아니라 '도서관 운동사'라고 지적인 표현과 같이 우리의 도서관은 참으로 힘들게 견디어 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점차 도서관 수가 증가되고 장서량이 많아지고 전문 인력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정부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따라 제도적으로 추진된 결과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의 도서관 정책담당 부서의 강화는 계속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사안이다. 도서관계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토론하여 정부로 하여금 정책담당 부서가 다시 문화관광부내의 조직으로 포함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사서교사 확충문제도 지금처럼 매년 변동되는 임용정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제정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 명칭변경 문제는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으나 또 언제 나타나 우리를 어렵게 할지 모른다. 복합적으로 엉켜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문제는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이미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그 실상을 자세하게 공개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서관장과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사서직 보임 문제도 도서관계가 계속해서 검토할 사안이다. 디지털정보 시대에는 정보와 지식의 다양화로 전문가에 의한 국가도서관 운영의 필요성이 한층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 정부가 이런 저런 이유로 도서관정책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약간의 발전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게 언제 또 무슨 이유로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2000년 초부터 시도된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은 대통령의 도서관 정보화추진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 지시에 따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디지털콘텐츠 확충을 통하여 도서관정보화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여러 연구에서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운영은 처음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조사보다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인력확충의 미비, 디지털 콘텐츠의 불충분 등의 이유로 충실한 정보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가 많다.

그 후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여러 도서관발전방안도 예산확보와 인력확충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업무방식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에 머물러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미래형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03-2011"은 정부가 공공도서관 발전계획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발한 도서관정책이다. 그러나 이 계획 중의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부족한 사서직원의 확충방안을 보면 정규직원의

보충은 단계적으로 하고, 계약직 사서, 자원봉사, 대학생 인턴쉽 등 다양한 보완책을 병행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계획단계부터 실천 의지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하고 있는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에서도 선진국의 정책동향까지 참고하여 작성한 발전계획이지만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보방안은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계획이 제시되고 있다. 사서교사 배치, 겸임 사서교사 활용, 도서관 담당교사 지정, 계약직 사서 배치, 순회 사서 활용, 도우미 활용 등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발전방안이 발표되기 전에 가졌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학계, 교육청, 시민단체로부터 참석한 토론자들은 사서교사의 배치가 없이는 학교도서관의 원만한 운영은 어렵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어서 발표된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에서도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이해하고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그 중에는 “교육인적자원부내에 도서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대학도서관평가제 도입 등 법, 제도 개정을 통해 대학도서관 발전을 지원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이 방안에 대한 실행은 아직도 희망사항으로 남아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도서관발전 방안은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적시에 제시되지 못하고 또 실천의지의 확실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도서관계가 정부의 정책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시민단체의 감시도 필요한 것이다. 정부의 도서관정책은 필요할 때 수시로 펼치는 한시성의 프로젝트 같은 사업성 과제가 아니라 제도에 따라 실행되는 영속적 업무이어야 하고, 또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문헌정보학계가 특별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도서관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회는 많지 않다. 오히려 대학도서관 관련 협의회에서 도서관 현안문제에 대하여 세미나를 열고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다. 대학의 연구자들은 여러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임에 연사로 참석하여 개인적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 보다는 학회차원에서 도서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찾아내고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자주 있어야 될 것이다.

도서관을 생각하는 시민단체들의 협력도 도서관계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 할 때라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 스타트 운동’,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 ‘한 도서관 한 책읽기 운동’ 등 도서관 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노력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